

“사퇴하기 좋은 시점” vs “검찰 고발 검토”...압수수색 공방

정치권, 검찰 조국자택 압수수색 이후 공방 거세져

한국·바른“檢 혐의입증 자신↑”...민주“피의사실 공포 도넘어”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한 이후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개인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며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에 대한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한 것은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이 높아보인다”며 “모든 상황과 정황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관여 개입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은 (조 장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한 달 내내 먼지떨기식 수사에도 나온 게 없다는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도

피성 현실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압수수색 받았음에도 조국은 검찰개 혐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적인 코미디”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인데, 어찌 보면 사퇴하기 좋은 시점이다. 곧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은 이제 나라 망신이 되고 있다”며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더는 국민 가슴에 상처 내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청와대 정무라인 또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더 어이없는 일은 조국 사태를 자초하며 정국을 파행으로 몰고 온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반성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도 모자란 판에 범죄 혐의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냉정히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고 잘못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란다고 강한 견제를 날렸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히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신뢰하지만, 검찰은 모든 국민이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의 위법행위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리는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 의원 15인,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원천무효 선언

“손학규 대표, 부당한 징계 교수시 중대한 결단 내릴 것”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수민 의원, 이동섭 의원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갈등이 퇴진과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로 증폭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 15명은 손학규 대표가 하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끝내 교수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18일 밤 손학규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유로 하 최고위원에게 당직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4개월 만이다.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 15명(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태규·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먼저 “이번 징계결정 전 과반의 최고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안병원 윤리위원장 불신임요구서를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불신임요구서 제출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원장은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두 번째로 징계 내용이 부당하다”며 “윤리위가 징계사

유로 든 당시 하 최고위원의 발언은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린 구태 정치인의 일방적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일부 오해소지가 있었다 해도 당사자가 내 차례나 사과의 뜻을 밝혔고 손 대표도 이를 수용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어 “세번째로 징계의 의도가 불순하기도 하다”며 “이번 징계는 공교롭게도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 이상 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온 직후였다. 손 대표가 당권 유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동원해서 반대파를 제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손 대표를 당을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는 잘못된 징계결정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하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끝내 교수해 당을 건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손 대표는 국민과 당원에게 선언한 당 지지율 10% 미만 시 사퇴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약속을 어기는 정당은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결코 받지 못할을 명심하고 대국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한국당 의원 퇴장한채 열리는 교육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통과됐다.

국정원 “돼지열병 北유입 명확지 않지만 평북 북부 돼지 전멸”

“정보수집·방역, 北 미온적”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24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평안북도 북부에 돼지가 전멸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기

자들과 만나 “지난 번 북한이 돼지열병 발병을 국제기구에 신고 했는데, 그 이후 방역이 잘 안됐다 (고 국정원이 설명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평안북도 북부 사육 지역에) 돼지가 아예 없다, 있는 집의 거의 없다고 한다”며 “(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던 징후들을 오늘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북한 당국이 돼지 축사에 근무했던 근무자들이 추석때 성묘를 금지했다고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돼지열병과 관련해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과 공동 방역을 하는 차원, 이를 투트랙으로 협조하길 희망하는데 북한의 미온적 반응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급여비	비율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저소득층	26,697원	5.3배

www.nhis.or.kr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칙의 안전 보강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